

성명서

북한의 핵무장화로 동북아 핵군비 경쟁 촉발과 원자력의 평화이용 위축 초래를 우려하면서, 북한의 국제 핵비확산체제로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기술자들의 모임으로서 원자력을 핵군비로서 전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에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사회가 에너지 부족과 기후변화에 크게 관심을 두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군비를 위해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세계가 추구하는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세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전세계 전력생산의 약 12%를 공급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공급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가능한 것은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않고자 하는 국제핵비확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국제핵비확산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를 통해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을 감시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은 원자력을 군사적으로가 아닌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 북한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핵무장화를 중단하고 국제핵비확산체제에 조속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화는 동북아의 핵군비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동북아에서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의 평화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심각히 저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모든 핵시설은 세계 각국에서 동의하고 있는 안전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확인 절차를 통해 북핵 시설에 대한 국제적인 안전성 입증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북한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핵무장화를 중단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로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2월 25일



한국원자력학회